전환과 불평등, 그리고 노동운동

박태주(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60+기후행동 운영위원)

광복 100년은 2045년, 지금부터 2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20년을 특징짓는 화두는 전환과 불평등,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는 게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 생각이다. 하나같이 우울하다. 그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단어는 민주주의.

전환의 시대다. 디지털·AI 전환과 녹색·생태 전환. 이들 전환은 함께 오는 파도라는 점에서 디지털 녹색전환 혹은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거나 충돌한다. 가령 디지털·AI 전환은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배출량 관리, 공급망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반도체 생산의 확대나 AI 데이터센터가 가져오는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는 탄소중립의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지체를 부채질한다.

그렇잖아도 '디지털 과잉함정에 빠진 최악의 생태국가"(김병권, 『AI와 기후의 미래』, 2025)가 우리나라다. 디지털 전환의 과잉과 생태전환의 지체가 공존하는 나라. AI와 기후 사이의 불균등한 전환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격차를 벌려가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던 나라가 지금은 핵발전소 건설에 올인하고 있다. AI 열풍에 올라탄 성장주의 공세에 밀리면서 기후와 생태는 잊힌 의제가 되고 있다. 날씨 더운 것 정도, 태풍 한두 개 더 오고 기껏해야 석탄화력발전소 몇 개 멈추는 것 정도, 텀블러와 에코백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SG는 의례적 수사가 되고 있고 '실존적 위험'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무역규제가 그나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저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할 수는 있을까. 생태전환은?

전환은 정의로울까

전환의 시대에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은 "전환이 정의로울 것인가?"라는 것이다. 쌍둥이 전환은 노동을 재편한다. 그것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노동조건, 작업방식, 직무와 숙련구조, 작업장 통제, 그리고 노사관계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 AI는 청년 일자리부터 타격한다. 청년들은 고용기회는 물론 숙련 형성의 기회조차 잃고 있다. 기후위기가 산업전환을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은 소리소문없이 밀려나고 있다. 녹색 일자리의 창출 못지않게 전환경로의 설계가 중요한 이유다.

기술발전은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플랫폼 노동이나 AI 뒤의 '보이지 않는 노동'(데이터 라벨러, 콘텐츠 모더레이터, AI 트레이너 등)에서 보듯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사실 AI는 노동을 없애는 기술이라기보다 '유령 노동'을 새로 조직하고 낮은 비용으로 배치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클라우드나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호명되지도 못한 채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사회적 보호와 노동자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실질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노동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의 과제는 전환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방향과 속도, 비용과 이익의 배분,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환은 기존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최적화하고 확장한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에 해당한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공동결정제도와 같은 '일하는 사람의 민주주의', 즉 산업민주주의를 말하는 이유다.

AI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작업장 권력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탈탄소 생산방식의 도입과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그것이다.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그리고 생산적 정의가 그것이다.

전환이 불평등을 완화할까

AI 전환과 녹색전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부정의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령 AI 전환은 대규모의 자본과 첨단 기술이라는 거대한 진입장벽과 승자독식 체제로 인해 기득권에 유리하게 설계되기 십상이다.

AI는 기후위기와 동행하면서 기존의 권력구조를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추동하고 지배하는 국가와 기업, 지구에 흉터를 남기는 추출식 채굴, 데이터 대량 수입, 거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의 배출, 이를 떠받치는 불평등하고 착취적인 노동관행'은 기존의 권력 불균형을 더욱 확대한다. 그것은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 내에서 힘의 단층선을 따라 작동한다"(크로퍼트, 『AI 지도책』, 2022).

AI나 탄소중립 투자는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양분하고 이는 지역별 산업분포와 소득, 나아가 세대·연령·성별 불평등을 확대한다. 노동시장만 하더라도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불안정 플랫폼 노동이나 단기 비정규 노동으로 밀려나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기존 산업의 숙련을 가진 중장년노동자는 하루아침에 '낡은 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환의 과정에서 불평등은 재난이다. "가난이란 …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것. 작은 사건이 큰 재난이 되는 것. 복구가 잘 안되는 것"(김애란, 『이중 하나는 거짓말』, 2024).

성장을 넘어 공유된 번영으로, 민주주의로

AI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듯이 기후위기 역시 자원과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권력구조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환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중층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작업장 민주주의, 산업·지역 수준의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형 숙의민주주의, 국가 차원의 정책조정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대화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전환정책을 협의·교섭·조정하는 제도라면 시민회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여 정보제공과 전문가 검토,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만드는 제도다. 물론 사회적 대화와 시민회의를 결합하는 방식도 있다.

전환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AI 전환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탄소중립·생태전환은 실현될지, 나아가 그 과정이 정의로울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지 … 어느 하나 주어진 결론은 없다. 하지만 AI 전환과 생태전환이 가져오는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한 운명은 아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 즉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경로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 아세모글루와 존슨(Acemoglu & Johnson, 2023)이 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다. 기후대응경로도 그렇다.

노동운동은 전환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온통 성장담론으로 가득하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상징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그렇다. 성장과 국가경쟁력, 지역균형은 말해도 불평등 문제를 말하지는 않는다. 전력공급과 용수에 대해서는 말해도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에너지 사용과 핵발전,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는다. 반도체 호황을 '공유된 번영'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AI 전환이 초래하는 탄소발자국에 대해선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전환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노동운동은 기업별 담벼락을 뛰어넘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수행할 수 있을까. 조합원의 편협한 이해를 넘어 노동자 일반의 이해를 추구하고 사회적 연대의 기반 위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껴안을 수 있을까. 흔히 유령노동자라 불리는 AI 발전 뒤에 숨은 미세노동의 담당자들, 클라우드 및 플랫폼 노동자들,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사라져가는 노동자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자이자 녹색전환의 주체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유지되겠지만 노동운동도 그러할까?"(Unions may have a long-term future, but do union movements?)" 콜린 크라우치(Colin Crouch, 1990)의 우울한 질문이다.